

민주노총등 시민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홍미리 기자 | 승인 2015.07.22 15:53

416명+416명 목소리 담아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청원입법했다.

중대재해특별법을 통해 사업장에서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나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해 이들로 하여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형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하려는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7월 2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과 노동자가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의 처벌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청원입법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후 제정연대는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관련 기자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받고, 416명과 416명(총 832명)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왜 배가 침몰했는지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침몰 이후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업과 기업을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규제해야 할 정부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기업 처벌법이 꼭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빠른 시일 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사진=노동과세계

이후식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유가족 대표는 2년 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를 통해 아이를 잃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18일 2주기 행사를 하면서 국가와 기득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저도 유가족과 함께 활동을 했지만 사회는 냉정했고 정부는 유가족의 노력을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은 “얼마 전 한화케미칼에서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때 회사가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해 너무나 부러웠다”고 말하고 “현대중공업에서 지난해 사내하청 노동자 9명, 올해도 2명이 사망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지회가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현장 산재 실태를 조사했는데, 노동부와 지정병원, 현대중공업이 한 통속이 돼서 범죄 수준으로 산재를 은폐하고 현대중공업은 1000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으며 이미지 광고를 통해 대표조선소라고 선전한다”고 규탄했다.

하 지회장은 또 “지난해의 적자를 빌미로 업체를 폐업하고, 소모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해서 무리한 작업을 강요해 철야작업에 내몰린 하청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사고로 죽어간다”고 말하고 “4만명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에게는 노동기본권도 주어지지 않고 노조 활동을 하면 해고당하고 타업체로 못간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기업살인법을 통해 하청노동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원청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사진=노동과세계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제정연대 집행위원장)는 재난사고와 산재사고 서법처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와 법 제정 방향에 대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사고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많은 위험을 감내한 것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전하고 “세월호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도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 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행한 청해진해운의 탐욕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인 김한식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배임횡령 등으로 징역 7년형만 선고받았으며,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책임자에게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라면서 “이는 세월호 뿐 아니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관료가 의무사항을 소홀히 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재난사고로 시민이 목숨을 잃어도, 환경에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 사람과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안전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돼야 하고,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렬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범국민 입법청원운동을 호소했다.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인권·시민·정치·사회·안전보건·법률단체 회원 416명과 416명, 총 832명의 목소리를 담아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한다.

박 상임운영위원은 “18인의 국회의원이 소개의원이 돼 7월 22일 입법청원에 함께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 전 국민적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나선다”면서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고 전하고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자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으며,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 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나가고자 한다”면서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토론하는 자리도 만든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